

2025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대전시민네트워크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370번길 22-1 공간이음 1층, TEL.042-331-0092, FAX.042-252-6976
www.cham.or.kr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짜 / 2025년 11월 26일(수)

발신 / 202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정혜용 간사,
042-331-0092/010-7257-0825)

제목 / 2025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활동 결과 발표

-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5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24년 대전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 및 산하기관,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시민들이 함께 만든 기구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식 전환을 선언하고, 각 위원회별 모니터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발표된 각 위원회별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통해 시청하며 모니터링했습니다.

4.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평가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네트워크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을 선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지난 3년간 내란 동조성 발언,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 일방적 폐기 등 의회 스스로 낮춘 공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전체의 낮은 수준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담아 우수위원 미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6. 2025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내용 : 202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문의 :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정혜용 간사(042-331-0092/010-7257-0825)

기타: 모니터링 결과 내용은 하단 참조

2025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 개요

- 대전광역시의회는 스스로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인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자 시기다.

- 특히 이번 감사는 9대 대전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지난 3년을 총괄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분명히 하고, 다음 의회가 출발선에서 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했다. 마지막 감사는 '치적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마무리'와 '개선의 출발'이 맞닿는 지점이다.
-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9대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실망스러운 장면만 보여주었다. 내란 동조성 발언과 성추행 가해 의원에 대한 두 차례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의 일방적 폐기, 주요 현안에 대한 형식적 공론화와 사후 설명 부족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었다. 그 과정에서 원칙없는 탈당과 당내 징계, 자리싸움 등 시민의 눈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었다.
- 이에 대전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방식의 전환을 선언했다. 위원회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모니터링으로의 확장이었다. 방청석의 감시활동을 넘어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의 눈이 대전시의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모니터링 참여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 방송을 통해 방청하여, 10월 28일 발표한 위원회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2. 4개 상임위원회별 평가 결과

-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질의와 평가 내용을 담았다.

1) 행정자치위원회

- 주요 질의
 - 해외통상사무소 이전

-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문제
 - 현 수탁기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을 들며, 종교 중심의 편향된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해당 센터가 청소년의 성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공성과 중립성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함.
- 젠더폭력 대응 체계
 -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디지털성폭력 증가 등 젠더폭력 현실을 언급하며 범죄 예방 및 사건 발생 시 신속조치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함.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나, 2024년 스스로 전액 삭감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반성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교복
 - 교복 구매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생활복 형태의 교복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함. 교육청 내 교복구매 제도 개선 TF 활동 관련, 형식적 논의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하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복 업체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혀 없었음.
- 특수학교 과밀 해소
 - 대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학교·학급 포화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 시점(2029년)까지의 3년 공백 방치를 지적하며 구조적 붕괴 위험을 제기함. 특수교육 수요 증가세에도 학교와 학급 증설은 제자리인 현 상황을 반영한 질의였음.
- 시민사회가 발표한 의제(성평등담당관 제도, 젠더폭력 피해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교복, 늘봄교실, 급식, 교직원 성비위)에 대한 점검을 일부 진행함.
- **교육위원회 총평**
 - 시민사회에서 발표한 의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룬 위원회였음. 그러나 질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단순 확인 등 당부성 질의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였음.

- 성평등 및 젠더폭력 대응 관련 의제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의해 제한적으로 유지됨. 대전교육청 소관 감사에서는 대전교육청의 해묵은 과제가 많이 다뤄짐. 그렇기에 형식적으로 묻고 답하는 감사가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야 했음. 구체적인 정책 점검과 구조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임.

3. 2025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9대 의회의 지난 임기 3년을 총괄하고 남은 과제를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전반적으로 철저한 준비 부족과 지엽적인 질의 반복으로 일관하며 의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구조적 문제 지적 및 거시적 정책 제시는커녕 개별 사업 현황 점검에만 머물러 '정책 감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감사는 9대 의회의 내란 옹호,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 일방적 폐기 등 실망스러운 행보에 대한 시민적 감시와 책임 요구 속에서 진행되었다. 대전 시민사회는 모니터링 방식을 전환했고, 특히 각 위원회별 핵심 모니터링 의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회는 이러한 시민 의제를 외면했다. 질의는 단편적인 사업 현황 확인에 그쳤고,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러한 당부성 질의 위주의 피상적인 감사는 의회가 정책 감사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과 같다.
- 특히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보조금 수혜'로 단순 축소하는 등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냉철한 견제 대신 무리한 개발 정책을 옹호했으며, 사적인 인연을 언급하거나 특정 민원 해결에 치중하는 모습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줬다.
- 전반적인 부실 속에서도 유의미한 질의는 분명 존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해외통상사무소 이전에 따른 세금낭비와 대전시 여성 국장급 인사가 전무한 인사구조를 지적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주요 현안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관련하여 대전시의 총괄 전담부서 부재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청소년 공공교통 이용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위원회는 현안이 담긴 시민 의제를 고루 다뤘다.

-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9대 의회에 있어 '치적 정리'의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마무리'와 '개선의 출발'이 맞닿는 지점이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의회는 부실한 감사로 일관하며 시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남겼다. 거시적 정책 방향 제시를 포기하고 지엽적 질의에 머무르는 감사를 또 다시 반복했을 뿐이다. 9대 의회는 임기 마지막 감사에서까지 스스로 정책 감시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결국 9대 의회는 스스로 낮춘 기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회 자체의 강도 높은 윤리적 쇄신과 책무 강화가 절실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 9대 대전시의회의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던 2025년 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한 결과, 우수 위원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3년간 내란 동조성 발언,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시민사회 3개 조례 일방적 폐기 등 의회 스스로 낮춘 공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공익성과 책임감, 그리고 정책 감사의 깊이를 충족시키는 위원을 찾아낼 수 없었으므로, 의회 전체의 낮은 수준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담아 미선정 결정을 내린다.

[별첨]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상임위원회별 의제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시민 의제

1) 행정자치위원회

- 대전충남통합 특별법
 - 시민 토론, 숙의 없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법안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주민의견을 소극적으로 수렴한 점, 여론조사, 공청회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지적해야함. 법안, 주민참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치해야 함.

- 행정통합의 명분이 ‘효율성 제고’임에도, 행정 단위의 규모 확대로 오히려 행정비용 증가 및 책임소재 불분명 우려가 존재함에도 그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시 우려의 문제를 점검하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인지 점검이 필요함.
- 대전충남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시민참여 부족, 행정통합 재정, 행정 등의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보완이 필요함.

● 시민사회 3조례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시민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했음.
- 시민사회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통해 1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토론회를 청구했지만, 한 차례의 공론화도 없었음.
- 시민참여의 부재, 시민 참여를 부재한 독단적 행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시민의견수렴을 무시한 의회 또한 성찰이 필요한 의제임.

● 0시축제

- 2025년 국정감사에서 3년간 ‘대전0시축제’에 투입된 시비가 124억 7천만 원, 여기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160억 원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구조는 관제형 모금, 즉 시의 행정 영향력과 관계된 편법적 재원 조성으로 의심받고 있음. 공식 결산서에 분리 표기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 0시축제 회계 투명성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조치가 필요함

● 클래식음악공연장 등 대전시 재정사업

- 전액 시비(3,300억원)의 예산으로 비슷한 규모의 부산의 콘서트홀(1,100억원)보다 3배 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정됨. 감세 기초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원마련의 불분명성 등으로 전형적인 세금낭비, 전시행정으로 비춰짐.
- 사업부지도 2024년 12월 완공된 중촌근린공원으로 이미 300억원 예산이 투입된 곳임. 조성한 공원을 행정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도 맞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 또한 없음.
- 대전시의 재정부담, 이후 대전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일뿐이며, 지적 중심의 전시행정임을 지적해야함.

● 홍보예산 지출 증가

- 홍보담당관 예산은 지난 2024년 4억 7,900만 원(6.60%) 증액 하며 전시, 홍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건축재정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대전시는 0시 축제와 같은 특정 사업에 홍보 예산을 투입했다. 대전시 주요 시정을 위한 홍보비도 크게 증액. 복지와 안전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외면한 우선순위 설정임.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함.

2) 복지환경위원회

● 보문산 개발

-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편익 분석에서 0.975로 결과 나와 적자사업임. 지역편익을 포함시켰지만, 일반적으로 타당성분석에 지역편익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 포함해도 적자사업이지만, 지역편익을 빼면 0.297로 결과 값이 뚝떨어져. 3.3배 부풀리기가 되는 지점 지적 필요함.
- 보문산 수요예측모델로 <중력모델> 사용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향임에도 입장편익이 고정으로 되어있어 보고서 자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짜맞춰진 내용임. 지적 필요함.
- 보문산 전망타워 타당성 용역에서 개발 근거로 제시한 2021년 대전관광개발계획에서 언급된 전망대는, 민선 7기 허태정 시장 당시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문대 부지에 전망대 건축 중에 있음. 때문에 이장우 시장의 타워 건설은 중복사업임. 보물산 프로젝트, 자연휴양림, 제2수목원 등 보문산 관련 개발계획만해도 8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시 예산 부담 가중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 보지 못할 것.
- 보문산 개발에 있어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존중없이, 시장 바뀌자마자 독단적으로 사업 변경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의견수렴 결과 전부 생략된 점 지적 필요함.

● 3대하천

- 대전시가 환경부가 부담해야 하는 관내 국가 하천 재해예방 정비공사(24공구)에 대해 시비 170억원을 들여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 현재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갔고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임.

- 대규모 준설로 인해 하천 생태계 조사와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준설사업 강행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등 생태계 피해 대책 마련하지 않은 점 지적 필요함.
- 갑천 노루벌 지방(국가)정원 추진 관련 1969억 예산 투입 예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비용 편익을 1.09로 책정했으나, 중앙투자심사에서 0.09로 평가함. 결국 반려된 사업. 보완 후 다시 시도 할 것으로 했는데, 애초에 사업성 없고, 노루벌 환경만 훼손 할것.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대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온실가스 감축(건물)으로 포함된 ‘수소훈소발전소 설치 및 운영’은 당장 설치여부가 미지수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확정적이지 않아 실질적 감축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음.
- 발전소 설치로 인한 감축효과가 2031년부터 산정되어 있지만 과연 2031년이 될지, 2050년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복합화력발전의 감축량을 빼면, 대전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에 처음부터 ‘구멍’이 나 있는 점 지적 필요. => 대형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에너지 공급 계획 수립 필요함.
- 대전열병합발전소 증설이 추진 중(2032년 준공)인데 증설할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증설 후 온실가스 배출예상량은 연간 약 17.8만톤에서 약 180만 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대전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35.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됨.
- 대전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대덕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의 연결성을 확보하지 않은 일방적인 증설은, 결국 지역 탄소중립을 요원하게 만들어,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증설은 중단해야 함을 지적할 필요 있음.
 - 금고동 공공형 골프장 개발 계획에 있어서도, 대규모체육근린공원, 재생에너지단지 등에 대한 검토 있었으나, 시민의견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골프장 개발로 방향 정함. 보문산 개발, 하천 준설, 금고동 골프장 개발, 노루벌 개발 등 1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 현황들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과정 생략된 점 지적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작동 여부 점검**

-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생활고 추정 모자 사망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단전·단수, 관리비·카드 체납 등 위기

징후가 명확했음에도 행정의 사전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긴급생계지원 이후에도 부채·고용·심리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재함.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정보를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복지 개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통보 이후의 행정적 대응이 전무했던 것으로 보임.
-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와 통보 이후 조치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야 함. 긴급지원 종료 및 탈락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 2015년 생활지원조례 폐지 이후 지역 차원의 생활안정 대책 부재 문제, 부채·고용·심리 상담 등 다각적 연계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있음.
- 복지 행정의 감시와 점검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임. 반복되는 생활고 사망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안전망의 실제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

3) 산업건설위원회

●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 대전열병합발전이 제출한 기후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증설 이후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약 18만 톤CO₂eq/년에서 약 180만 톤CO₂eq/년으로, 무려 10배가 증가함. 대전시 2018년 전체 배출량의 21.1%에 해당되는 경악할만한 양이다. (2030년 감축목표치와 비교해보면 35.1%에 달한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감축계획이 없다면, 결국 대전시와 대덕구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사실상 무력화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문제제기 필요함.
- 증설 후 온실가스 감축전략 세부내용을 보면 단기로 저탄소(저공해) 건설기계 이용이나 친환경 사무실 운영 등의 효과가 미비한 계획 뿐이고, 중장기로 아직 기술개발 단계의 계획인 수소혼소나 탄소 포집활용 저장기술(CCUS)처럼 현실성 없는 계획 뿐임을 지적할 필요 있음. (수소연료 도입의 경우, 30%의 수소혼소 시 온실가스 11% 감축에 불과함)
- 대전열병합발전 환경부 굴뚝TMS 자료(cleansys.or.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2022~2024)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29,659kg/년에 비교하면 9배 이상 증가한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연간 배출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됨 저녹스버너와 SCR설비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열공급은 줄고 대기오염물질 부담은 늘어나는 증설사업이므로 대전시가 중단하라는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함.

- **주차장 태양광 확대 관련 대책**

- 2019년 대전시는 <공공유희부지 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공공기관과 시와 시 산하 공기업 주차장 등 유희부지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한 바 있음.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순위~2순위에 해당하는 부지 총 69곳을 조사한 결과 설치한 곳보다 설치하지 않은 곳이 2배 이상 많음. 그간 태양광 지원 관련 행정을 소극적으로 시행한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결과임.
-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대전시는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전국 주차장 태양광 현황 조사결과, 대전의 경우 158개 공영주차장이 조사되었고 설치잠재량이 102,774KW로 확인됐다. 시행령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대책을 수립할 필요 있음.

- **3칸(2단)굴절버스 시범사업**

- 대전시가 ‘계획 수립→실시설계 용역→최적 차량 결정→차량 발주’ 절차를 밟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한 점, 명확한 용역 결과가 없다 보니 교통공사 내부 검토자료인 B/C 3.27과 국회 토론회 시 제시된 철기연 발표자의 1.34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함.
- 기본용역 결과도 없고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도 없는 사업실시, 정림동에서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있었지만 실제 노선에서는 정림동 배제, 이에 대한 지적 필요함.
 - 기본계획은 물론 실시설계도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입찰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 체결함. 150억 원의 큰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는 물론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점 지적 필요함.

- **2호선 수소트램**

- 현재 수소의 경우 그린수소가 아닌 다른 가스를 통해 개질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애초 계획은 금고동 매립장의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연료 사용키로 했으나 생산량 수급에 문제 발생. 이후 CNG 가스 개질 사용, 향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수소를 사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수소연료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수소 차량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가는 상황이고 바이오나 천연가스 개질시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아 탄소제로에도 역행하고 있는

상황임 그렇다면 지원을 전제로 하는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트램이 과연 타당한가 지적할 필요가 있음.

- 국회 토론 당시 철기연 발표에 의하면 대전 트램의 B/C 분석이 0.55이며 3칸 굴절버스는 1.34인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지적 필요.
- 본격 공사 진행 시 운행 교통수단들과의 마찰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사 진행 시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명확한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 필요.

4) 교육위원회

● 대전시청 교육정책전략국소관

○ 성평등담당관 제도의 실효성 점검

- 대전시는 각 실·국별로 양성평등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양성평등담당관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형식적 지정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등 점검이 필요함.
- 양성평등담당관 제도는 모든 정책 영역에서 성평등을 반영하기 위한 핵심 행정 장치임. 그러나 양성평등담당관 제도 운영이 형식적이고 실질적 권한이 미흡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법적근거 : [대전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8조] 각 실·국·본부별 양성평등담당관 지정 의무 및 주요 업무(성 주류화 점검, 성인지 반영, 우수사례 발굴 등) 명시되어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시·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획조정실장급)과 전담전문인력(5급 이상)을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스토킹, 딥페이크, 교제폭력 피해 지원 사업 운영실태 점검

- 2025년 신설된 스토킹피해자 솔루션 협의체(예산 8백만원), 딥페이크범죄대응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및 시민감시단 운영(예산 20백만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점검이 필요함. 특히, 올해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사건 이후 대전시가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젠더폭력 사건이 증가함에도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단순 예산 신설이 아닌 실질적 피해지원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지 행정을 점검해야 함.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예산 삭감 이후 현황 점검**

-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예산이 2024년 5,872백만원에서 2025년 5,298백만원으로 574백만원이 삭감된 후 발생한 피해나 공백이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함.
세부사업이 축소나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여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경기침체 및 돌봄 부담 증가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전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시키지 않도록 예산운용 과정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함.

-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과정 및 운영 실태 점검**

- 2022년 수탁심사 회의록에서 특정 단체(넥스트클럽)에 유리한 의도적 질문과 평가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었음.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여부 및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현 수탁기관의 교육 내용 중 '성품성교육' 명목으로 성역할을 강화하거나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의 성품이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사례 조사 등 점검 여부 확인이 필요함.
- 올해로 수탁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재수탁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 체계와 성평등 기준 반영 등 공정성 확보와 평가의 객관성 확인이 필요함.
- 청소년 대상 성교육기관이 성평등 가치와 인권 관점에 기반하지 못한다면 이는 왜곡된 성인식 확산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음. 공공기관 수탁의 공정성 확보와 성인지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함.
- 대전시는 정책의 예산·제도·운영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행정의 기본 원리로 정착시켜야 함. 각 사업의 신설·축소·수탁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공정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행정의 책임이 확보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대전교육청 소관**

- **넥스트클럽협동조합과 리박스쿨**

- 극우 성향 단체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전의 초,중,고등 학교에서 약 750회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도 진행 중임. 리박스쿨 사태가 보도되었을 때 교육부 지침으로 관련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대전이 17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면담을 진행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넥스트클럽협동조합과 리박스쿨이 밀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아니라면서 넥스트클럽협동조합 강사들에 대해서는 면담이나 조사는 커녕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극우 성향 단체와 관련된 강사들을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퇴출해야 함

○ **교복**

- 담합 : 업체들이 담합하여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값이 결정되고 있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10만원 이상 비싼 상황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큰 상황임. 담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
- 대전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정장식 교복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편하고 불필요하며 품질도 떨어지는 정장식 교복보다 생활복과 체육복을 선호함. 하지만 정장식 교복을 강요하는 학칙과 교육청 지원제도 때문에 30만원 가량의 교복지원금은 정장식 교복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여벌 셔츠와 체육복은 사비를 들여 구입해야 하므로 사실상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이 무색한 상황임. 이제 정장식 교복은 없애고 지원금으로는 정말 필요한 형태의 의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야 함

○ **늘봄교실**

- 늘봄학교 정책에 따르면 2026년엔 6학년까지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시행되는 지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 올해 늘봄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은 차질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돌봄전용공간도 인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6학년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학생들도 늘봄교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돌봄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함.

○ **급식**

- 조리종사자 파업과 준법투쟁으로 인해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피해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 정도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의지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 **교직원 성비위**

-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성범죄 혐의로 수사 받는 교직원 절반이 직위가 해제되지 않은 채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자료가 공개 됨. 올해 5월, 유성여고에서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남교사가 고3 담임을 맡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고 생기부로 협박을 하여 학생들이

괴로워하다가 언론에 제보한 사실이 있었음. 대전교육청은 성범죄 혐의가 있는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현황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수사 개시단계부터 엄격하게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함.